

靑 특감 파견 직원 비위 의혹 감찰

대검, 진상조사 나서 靑 “특감반원 전원 교체”

검찰이 청와대에 파견됐던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검찰 직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오후 청와대로부터 직원 복귀통보와 비위 사실 내용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파견 감찰반 직원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 이후 비위가 드러날 경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9일 특별감찰반원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이날 오후 6시께 이들 전원은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원 교체 지시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의 ‘비위’ 행위에서 비롯됐다.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 김모씨는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캐물었다가 적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해당 수사관은 원래 소속인 검찰로 즉각 복귀 조치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결과, 이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행정요원은 추가로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추가로 몇 명이었는데’는 질문에 대해 “숫자나 혐의 내



청와대 본관 정문 모습.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용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위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서도 “표현하기 어렵다”며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총 책임자인 조수석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먼저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없다 하더라도 특별감찰반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특별감찰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할 것

을 건의했다.

이에 임 실장은 조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6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원 파견자의 소속 결정 여부는 비서실장의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행위자의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서로 정식 통보할 것”이라며 “특감반원 전원은 오늘자로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기관장은 청와대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원 교체, 복귀하는 건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라며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전원 교체’ 지시와 관련 “

해신과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감찰업무 총괄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으로 세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은 청와대 외부 부처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비위’ 논란이 불거진 김모씨를 즉각 감찰에 돌려보내고,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 구두로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라, 파견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청와대에 없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53%... 전주와 동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당별 민주 41% · 한국15% · 정의11%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동일한 5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을 설문한 결과, 53%가 긍정 평가했다고 30일 밝혔다.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전주와 똑같으며 부정 평가율은 1%p 증가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28%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꼽았다. 이어 ‘외교잘함’(12%),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대북·안보 정책’(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각 6%), ‘개혁 의지·적폐 청산’(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47%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대북 관계·친북 성향’(16%),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각 4%), ‘독단적·일방적·편파

적’(3%) 등이 지적됐다.

지지정당별 문 대통령 긍정 평가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3%, 정의당 지지층 71%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8%)보다 부정률(87%)이 높게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긍정률(23%)보다 부정률(73%)이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긍정률(29%)보다 부정률(53%)이 높았다.

연령별 긍정·부정률은 20대 61%·28%, 30대 60%·29%, 40대 64%·31%, 50대 51%·44%, 60대 이상 35%·57%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무당층 25%, 한국당 15%,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p이며, 1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고용부, 이달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낸다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내놓는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페넨타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12월 중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

응 매뉴얼’ 마련을 추진해 왔다.

매뉴얼에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3개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 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뉴스

도의회 예결특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0일 전북도 과학교육원(익산시 선화로)과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군산시 옥구읍)을 찾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재정사업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기관인 전북도 과학교육원은 지난해 5월 익산시 부송동에 이전 개원한 곳으로 11개관 105종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발명교육센터, 수학체험센터, 영재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대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북도 과학교육원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전북도 과학교육원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1대 전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날 재정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비위 수사관’ 피감기관 채용 지원 추가 적발...靑 “사실 인지”

지인 수사를 경찰에 캐물었던 것이 적발되면서 복귀 조치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 김모씨가 자신이 감찰하던 부처 채용에 지원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정수석

실은 사실을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세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 중이므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직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

해당 부처는 특감반에서 담당하던 피감기관 중 하나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후 이직 사실을 특감반에 통보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부적절성에 제기되면서 율기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엄중한 잣대로 고위 공직자 비위 감찰 업무를 맡는다. 정

작 소속 직원의 피감기관 이직 시도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이제는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